

#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공방 격화

## 국힘 “영장 실질 심사 자진 출석” 민주 “정치 보복, 檢 정권 돌격대”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여야간 표 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양측의 ‘표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의 빗장을 풀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며 이 대표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자’, ‘검사정권의 돌격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맹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 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설득할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판사”라며 “변론은 국회나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 준 것처럼 이제 불체포특권이라는 빗장을 풀고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탄정치, 의회독재야말로 ‘법치탄압’”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

회를 열고 “이 대표가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키지 안 지키지도 국민이 보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갖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인가”라며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옹아했다”며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경 상근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를 입증할 어떤 물증도 없다. 돈이 흘러간 흔적도 없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배임이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한 전대미문의 검사독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도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장 청구에 대해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들은 “보복성 수사”라며 당내 결속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 등과 공조를 통해 반윤 연대를 구축, 대응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 대표 퇴진 목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 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건데 이런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 되겠나”라며 “지금 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송부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사흘 뒤인 27일 표결이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여야, 北 미사일 도발 일제 규탄

여야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일제히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모한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가 따를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어떤 위협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나아가 북한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尹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 등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소병철 “여순사건지원단 인력·예산 확대 강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지원단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전임 지원단장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공무원 가급(4급상당) 1명, 나급(5급상당) 1명을 증원했다”며 “인력 증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인력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 주경시 지원단이 외부전문기관에 희생자·유족·집단학살지 추정지 발굴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또 지자체에 희생자와 유족,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 업무를 촉탁해 협조·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희생자 및 유족 분들이 연고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단으로 공무원을 파견해 한시적으로 심사와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양정숙 “서민금융상품 공정 금리 도입 필요”

양정숙(사진) 무소속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15’ ‘사잇돌대출’의 부실화율이 적용금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며 “서민금융상품의 성공 열쇠는 금리인 만큼, 공정 금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출금리 연 10.5% 이하, ‘새희망홀씨’대출의 최근 5년간 연체율은 2.6%였다. 대출금리 연 6~10% 내외의 ‘사잇돌대출’의 5년간 연체에 따른 지급보험금 비

율은 0.04%였고, 대출금리 연 15.9% ‘햇살론 15 대출’의 3년간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11.2%로 금리에 따른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 내놓는다면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금리 도입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정의 ‘쌍특검·이 대표 체포동의안’ 입장차

### ‘김건희 특검’ 의견차 커 민 “국민 특검”... 정 “수사 먼저”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 “가결을”... 민 “이탈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의당 설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방탄 국회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과 계속협상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의 정의당을 설득하기 보다는 당내 이탈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내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반대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은 정의당의 벽에 부딪혔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민주당은 즉시 ‘국민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무리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슬로

우’트랙이 돼버린다고 우려한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언급할 시기는 아니라며 정의당에 필요성을 설득하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양당 모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다만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반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50억 클럽’이 특검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더 크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개혁 논의 기획위원회 구성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진이 지난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야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20일에는 청년 정치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모임 운영진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

의를 열어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제도 개혁방안 및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동력 있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기획위는 정성호·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달 8일 이후에 전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정치개혁 논의 과정을 추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및 대통령실과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며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높여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